

또한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 인 무연탄 사용을 일정 수준 유지 할 수 있도록 영동 및 영월화력 등의 폐지시기를 조정하여 일단 4~5년 이상 연장토록 하는 한편,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비한 설비보강 작업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기를 조정함으로써 전력예비율이 다소 하향조정되었으며 2001년까지 약 2조원의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91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후 92년 최대수요 증가율 둔화와 그동안의 국내외의 여건변동,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92년 12월 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되었

다. 이는 전원개발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향후 전력수요의 재예측, 환경규제 강화, 입지, 재무여건을 감안한 적정 전원구성비의 재검토, 장기적인 적정 설비확보규모 수준(공급신뢰도, 예비율)의 재검토 보완, 단위기격상용량 도입시기, 석탄신기술 개발과 연계한 검토 등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 확정될 예정이다.■

았다.

이 委員會는 현재 日本 원자력정책의 기본지침인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의 재검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반송하여 들어오는 플루토늄의 해상수송에 대한 국내외의 예상 밖의 강력한 비판에 위원들 사이에서는 낭패와 망설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고속증식로는 연료로 사용한 플루토늄보다 많은 플루토늄이 회수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연료에서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고속증식로에서 다시 이용하는 원자연료 사이클을 확립하면 우라늄자원을 60배 정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원자연료사이클의 실현은 석유 의존의 체질에서 탈피할 수 있는 日本 에너지정책의 기둥인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기반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남아돌아 원자력 개발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플루토늄은 무기용으로서 테러리스트집단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게 됐다.

한편,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고속증식로의 경제성과 원전반대운동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들에 봉착하여 잇달아 계획의 중지 내지 수정을 결정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속증식로의 개발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日本 뿐인 것이다.

國際管理構想도 擡頭

흔들리는 日本 플루토늄政策

日本 원자력정책의 진로가 흔들리고 있다. 우라늄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내걸고 플루토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日本이지만, 다른 외국으로부터는 「필요 이상으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속출, 국제적인 고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美露 양 대국의 핵군축과 그에 따른 핵물질의 과잉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日本 정부의 현실인식이 너무나도 안이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日本 국내에서는 日本이 냉엄한 국제여론을 각오하면서까지 종래의

플루토늄 이용노선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외의 정세변화를 배려하여 노선의 재검토를 추진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批判에 대한 망설임

『왜 日本의 플루토늄 이용정책에 불안의 소리가 높을까? 日本에 대한 신용이 없어서인가?』

『군사이용과 평화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2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日本原子力委員會(위원장 科技廳 長官)의 專門部會에서 이러한 의논이 오고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많은 보유는 핵무장의 의혹을 초래할 수도 있다.

1개월 전 日本原子力産業會議의 모리 전무이사는 東京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와 만났을 때 『日本은 무엇 때문에 경제성도 없는 플루토늄에 집착하고 있느냐?』고 힐난을 받았다.

상대방은 미국 민주당에서 원자력통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모리 전무이사는 플루토늄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다고 반론했으나, 미국이 日本의 플루토늄 이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숨은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평화이용의 자세는 인정한다. 그러나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도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92년 11월 하순에 日本에서 개최된 핵확산금지에 관한 민간기구의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어느 나라의 참가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을 앞세워 종래의 노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日本에 대하여 주변 국가에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93년 1월에는 미국에서 클린턴 정권이 탄생한다. 그의 원자력정책은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플루토늄의 이용을 포기한 카터 정권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핵확산금지문제로 日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정부관계자도 많다.

미국 새 정권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IAEA가 모색하고 있는 플

루토늄의 국제관리 구상에 日本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결백」을 세계에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구상이 구체화되면 日本의 플루토늄 이용도 국제기구의 사찰이 필요하는 등 까다로운 작업과 수속이 예상되고 있다.

未完成의 靑寫眞

日本에서는 고속증식로의 개발계획을 대폭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原子力委員會 專門部會 멤버의 한 사람은 『증식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는 개발 베이스를 늦추어도 좋지 않은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의 고속증식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플루토늄의 소비를 목적

으로 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식기술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부족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실용화를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日本原子力發電(株)의 연구개발본부장은 『계획이 크게 늦추어지면, 어렵게 축적한 기술을 계승할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축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로부터 해상수송하고 있는 플루토늄이 1월 5일쯤에는 이바라기겐의 東海港에 들어온다. 플루토늄의 대량이용시대를 한 걸음 내딛는 것과는 반대로 장래의 플루토늄 이용을 위한 日本의 청사진은 아직 그려지지 못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92年 12月 29日 朝刊)■

에너지危機 맞은 東歐圈

東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옛 소련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옛 소련의 석유생산이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석유, 천연가스, 전력수송의 길목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관계가 계속되어 장래의 에너지安保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公共서비스에도 危機

일찍이 옛 소련으로부터 東유럽

(옛 동독 제외)에 日當 1백60만배럴을 수출하고 있던 석유수출이 91년에는 약 50만배럴까지 격감했으며, 이러한 상태는 9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東유럽 중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는 외화가 팽박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두 나라이다. 東유럽과 옛 소련 사이의 무역이 원칙적으로 교환가능한 통화決済로 바뀐 결과, 루마니아에서는 91년 1월을 마지막으로 옛 소련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은 중